

#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지역 의료 공공성 확충 방안



- 일시: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 장소: 제주도의의회 도민의 방
- 주최: 강경식,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진/행/순/서

- **주제발표** 좌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주제발표 | 제주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의료 공공성 확충방안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의사 고병수

- **토론**

- 토론 ① -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토론 ② -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③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토론 ④ -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 주제발표

# 제주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의료 공공성 확충방안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의사 고 병 수



#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

-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지역 의료공공성 확충 방안

2015년 7월 14일(화) 대안연구공동체 고 병 수

## < 오늘의 내용 >

### 1. 의료의 공공성이란?

- (1) 공공의료의 정의
- (2) 공공의료 vs 의료의 공공성

### 2. 의료 공공성과 영리병원

- (1) 영리병원이란?
- (2) 세계의 영리병원 추세, 그리고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시기상조인 이유
- (3) 제주에서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

### 1. 의료의 공공성이란?

#### (1) 공공의료의 정의

공공의료란 보건의료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찾아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하는 보건의료 영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법률을 정하고 정책을 통해 이의 실현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문안을 살펴보자.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이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발생 규모나 전파 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설립이나 운영 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즉 정부도 공공의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공공의료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공공의료에 관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느니,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니 확충해야 한다느니 많은 우려와 조언을 한다. 모두가 소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만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환경과 달라진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공공의료를 말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러한 내용을 접하고 실천하는 여러 조직들 또한 3~40여 년 동안 생각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표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위에서 언급한 공공의료의 정의에서 보듯이 마치 공공의료는 정부의 역할이 중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몇 가지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어서 더 풍부한 연구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인식 속에 가져야 할 내용들은 첫째, 공공의료의 개념을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를 거쳐 정리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 둘째, 공공의료를 반드시 정부의 역할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셋째, 한 나라의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Public health)와 민간의료(Private health)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구분	과거 법률	개정 법률
정의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대상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국·공립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영역	<input type="checkbox"/> 명확한 구분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의료취약지역의 해소 <input type="checkbox"/>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 <input type="checkbox"/> 필수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의 해소 <input type="checkbo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2) 공공의료 vs 의료의 공공성

공공의료가 아직은 모호한 정의를 달고 있지만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가 한 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의료의 공공성은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여러 보건의료 자원을 결합시켜 보건의료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경우가 공적 영역에 속하지만 한국은 의사들이든, 의료시설이든 대부분 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에 이러한 확대된 개념을 이용하여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의료의 정의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 이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김창엽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다.

김창엽 교수는 공공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공성’은 하나의 특성으로서, 소유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만큼 내포와 외연이 모호한 것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보건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소유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이 때 공공성은 ‘좋은’ 또는 ‘양질’의 보건의료의 특성, 즉 보건의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과 거의 차이가 없다(‘공공보건의료의 확장과 민주적 공공성’ - 2012년 6월 8일, 서울시/의료생협연합회 토론회)”

김창엽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공공과 공공성에 대한 구분이 정의 내리기도 어렵거니

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현재 한국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보건의료 운동이 굴러가다보니 혼란도 오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니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거나 도시형보건지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것이다. 서울대병원이나 지방공공의료원들이 경영에 목매는 현상도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에 혼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사립병원이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안 가지고 있을까?

한국에서 의료인이든, 의료기관이든 90% 이상이 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공공의료를 주장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공공병상을 늘려라? 공공병원을 늘려라? 공무원 성격의 의사 아니면 보건소 의사 인력을 늘려라? 물론 부족하기에 필수적인 의료시설이나 인력, 기관들은 확대해야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변화된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현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공공의료의 확장이지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물적 인프라의 확대가 아니다. 공공의료의 확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계적, 혹은 소유의 개념에서 말하는 공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에서의 공공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소유에 의한 의료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의료이다. 그렇다면 공적 관계의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환상이나 도그마를 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적 인프라를 늘리려고 돈과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현재 있는 구조를 이용하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 2. 의료 공공성과 영리병원

### (1) 영리병원이란?

영리병원이란 투자자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병원으로,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이 날 경우 배당 등을 통해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하는 병원을 말한다. 한국의 모든 병원은 '환자 진료'가 법적 목적인 비영리법인으로 환자진료를 통해 생긴 수익은 다시 병원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또한 비영리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두게 하여 '의료의 영리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의료법 33조에 따라 한국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의료인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 모든 병원은 법적 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환자 진료'에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으나,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 생긴 수익은 다시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 삼성의료원, 현대아산 병원 등도 기업이 설립하고 소유한 병원이지만 비영리법인이다.

## (2) 세계의 영리병원 추세, 그리고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시기상조인 이유

여러 나라들이 공공의료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이유는 교육과 복지와 더불어 의료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평한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수준을 지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 병원이 국립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을 합쳐도 5% 안팎에 불과하지만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병원 비율은 75%이다. 나머지 25% 내외는 민간의료 영역이지만 이 중에는 영리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되거나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재난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해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국가적 보건의료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정부)의 임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 수준에 무분별한 영리병원 허용은 분명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은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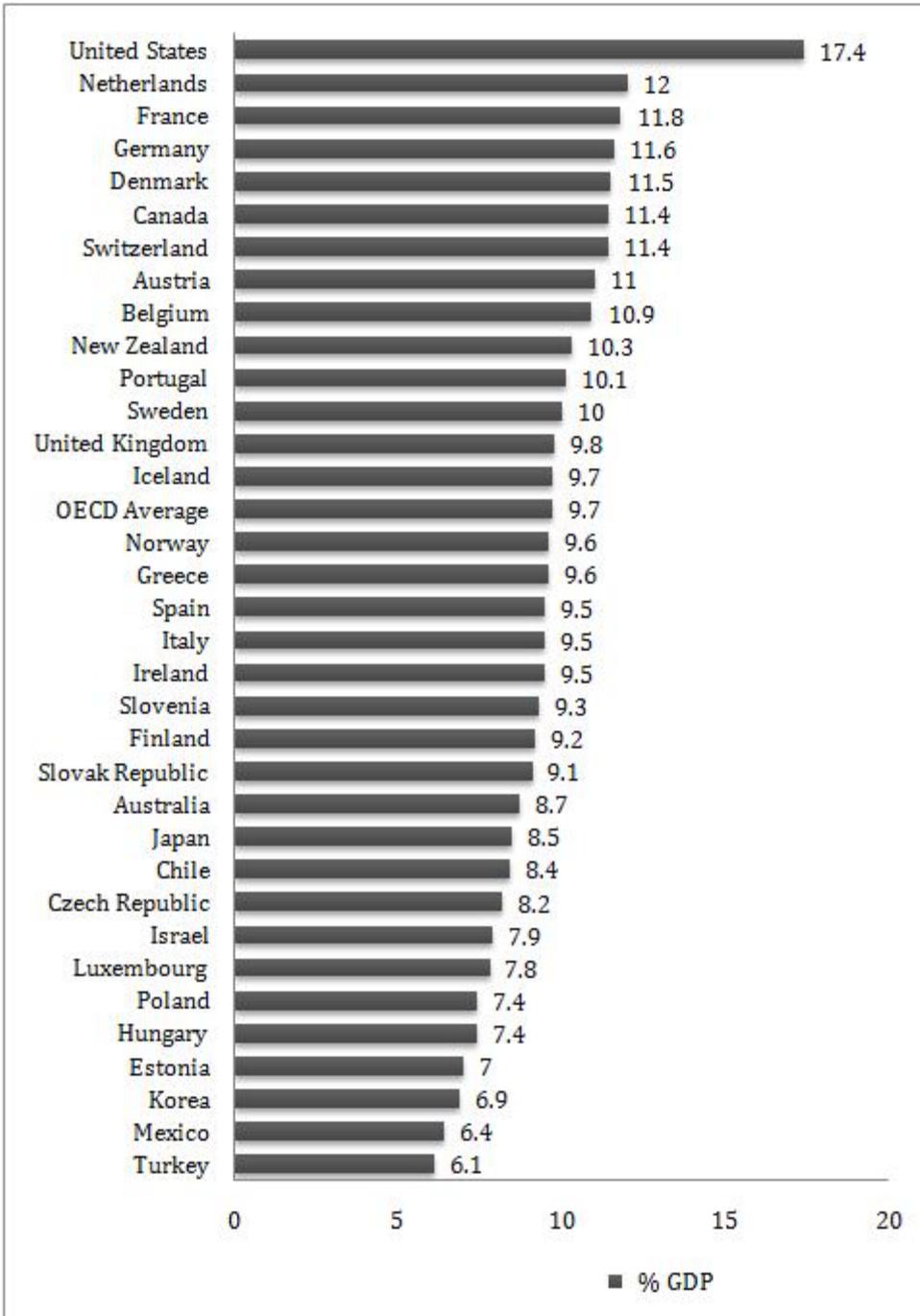
첫째, 낮은 공공의료 재정

둘째, 낮은 공공의료 인프라

셋째, 건강보험 체계 붕괴 우려

넷째, 의료 시스템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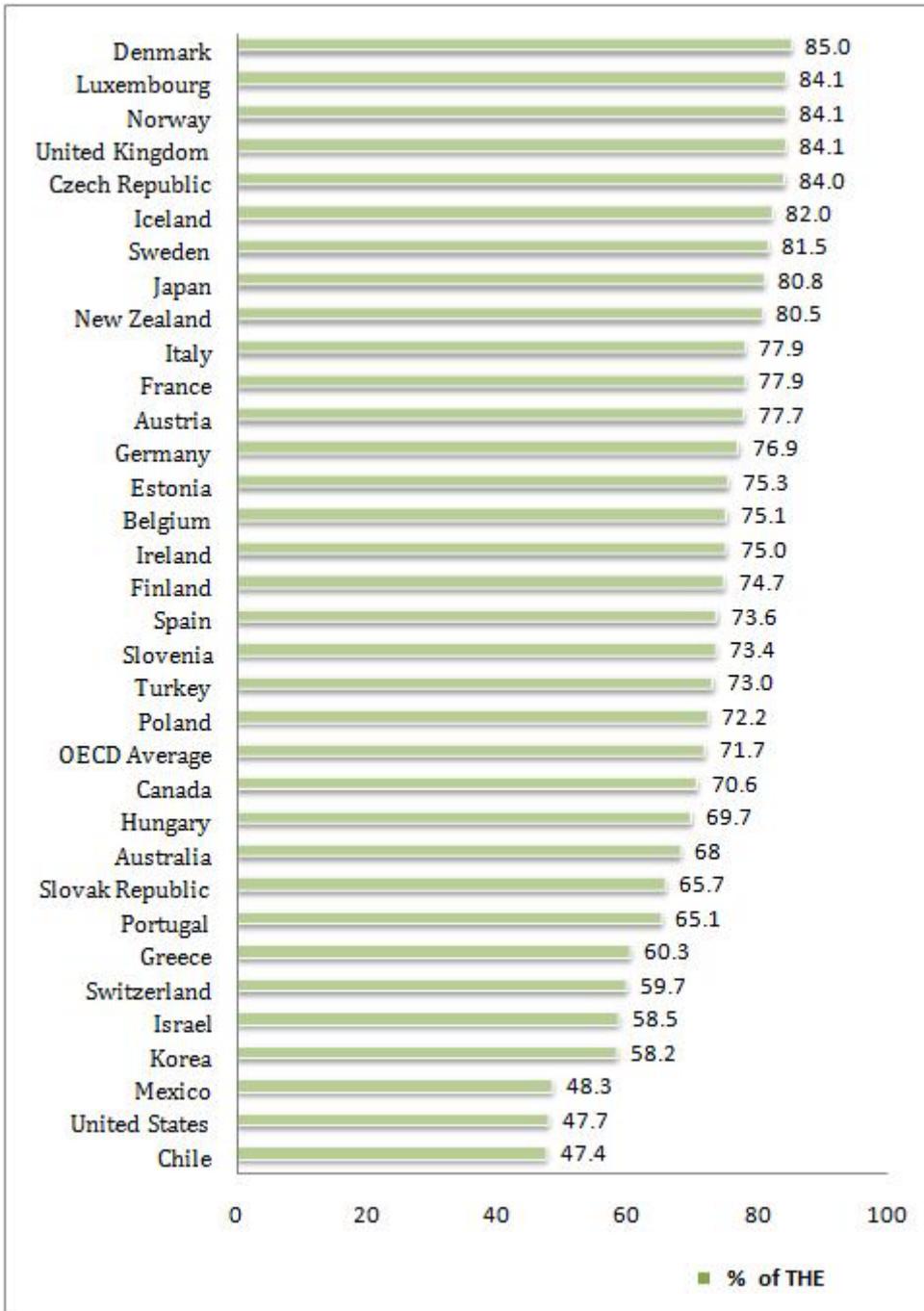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 of Total health expenditure / GDP , 2009)



자료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2009년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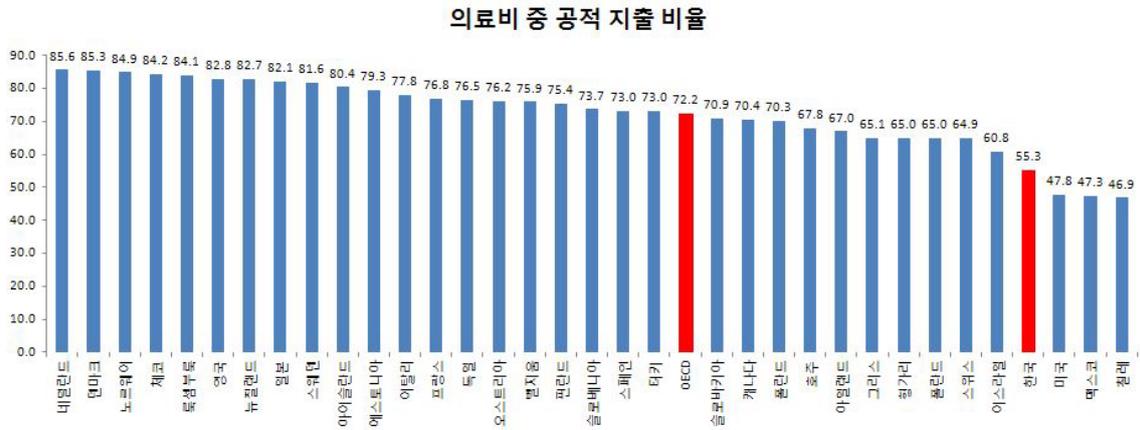
2009년 자료가 없는 일부 나라는 그 직전 자료 인용함  
 OECD 평균은 9.7명인데, 한국은 순위가 최하위권에 있으며, 6.9명이다.

그림 2.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 of THE)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2009년 수치)

그림 3. 의료비 중 공적 지출 비율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13)

표 2.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012)

(단위 : 개소, 병상, 명)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민간비율
기관 수	3,669	59,184	94.2%
병상 수	60,408	541,180	90.0%
의사인력	13,748	112,254	89.1%

\*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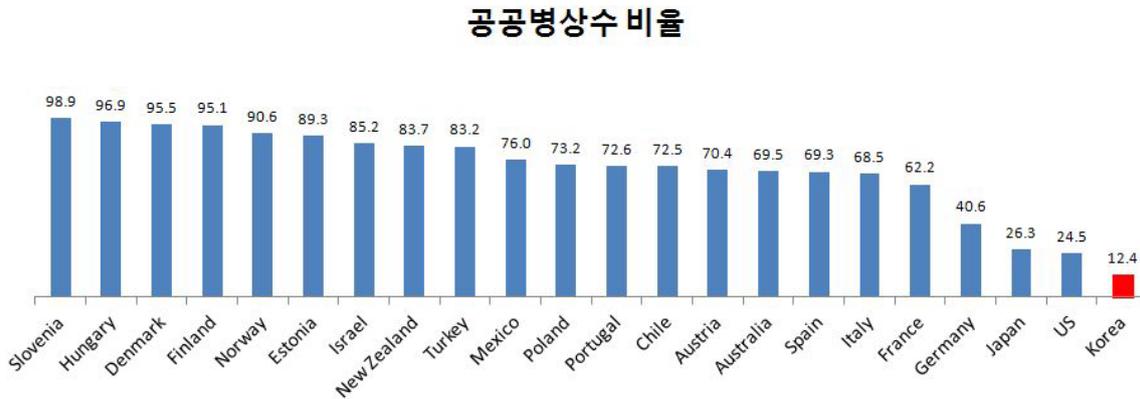
표 3 국내 공공의료기관 현황과 외국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기관 수	6.4	56.4	35.2	25.8	18.0	26.8
병상 수	12.8	69.5	62.5	40.6	26.4	24.8

\* 병원급 이상만 비교

그림 4. 공공병상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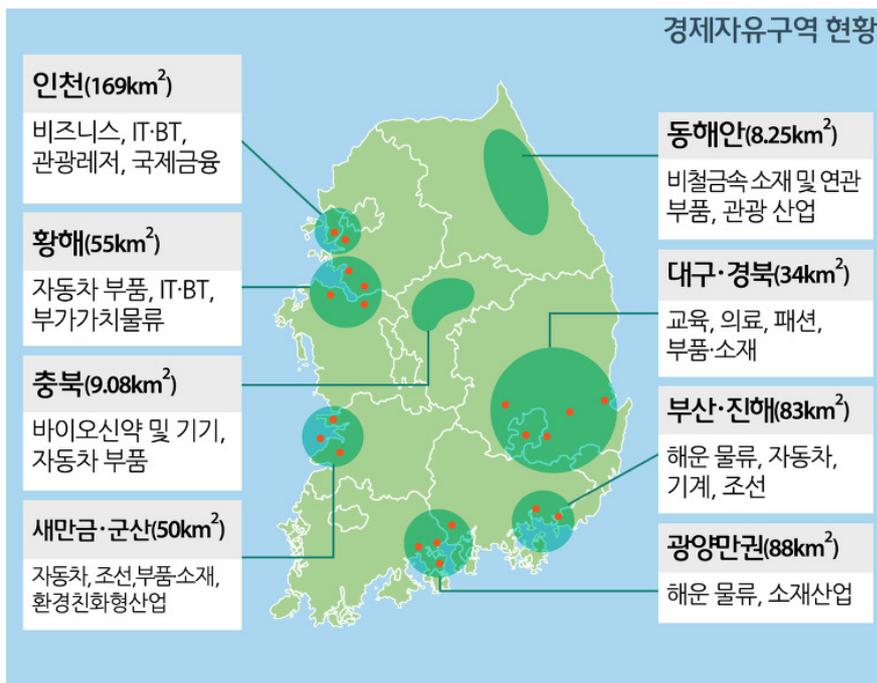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13)

### (3) 제주에서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제주에서는 공통적이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노정 되기에 간략히 기록해 보자.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제주도와 전국 8 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를 조속히 창출하여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환 자 유치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대 효과로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의 변화

- 2002년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기업 직원 등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설치가 허용
- 2004년 - 내국인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 - 국내 의료법인도 합작 등을 통해 영리법인 참여를 가능하게 함
- 2012년 - 외국 자본 50%, 외국 의료진 10% 이상, 내국인 환자 100% 진료 가능 등 시행규칙 제정
- 2014년 -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뒤야 한다'는 규정을 '진료 과목별 1명 이상'으로 완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

- 첫째, 영리병원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
- 둘째, 영리병원 1호라는 한국 보건의료 역사에 불명예가 제주도에 새겨짐
- 셋째, 영리병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특별한 편익이 없다는 점
- 넷째, 도내 의료 생태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

표 4. 제주도 의료분야의 변화와 현황

구 분	단 위	1946	1968	1988	1998	2002	2006	2009
<b>의료기관</b>	개소	5	37	119	247	324	357	310
• 종합병원	"	—	—	2	5	5	5	6
• 병 원	"	1	1	6	—	3	4	10
• 의 원	"	3	32	96	180	263	295	294
• 보건기관	"	1	3	15	62	53	53	64
<b>의사 수</b>	명	20	50	183	330	511	614	770
• 의사 1인당 인구	명	13,320	7,160	2,781	1,618	1,090	903	745
<b>의약업소</b>	"	10	46	154	192	192	221	218

\* 보건기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의사 수 : 개원 327명, 근무직 290명, 전공의 48명, 공보의 74명, 기타 25명



## 토론 ①

강 경 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토론 ②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③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토론 ④

양 연 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 성명서 · 기자회견문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성명서

### 원희룡도정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원희룡도정은 도민의 소리를 들으라 -

4월 2일 원희룡도정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의 4개과로 되어 있고,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병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돈벌이에 있음을 밝혔다.

노형동에 드림타워를 만들겠다고 도민의 반발을 샀던 곳이 녹지그룹이다. 서귀포 토평동 천혜의 경관지에 자리잡고 부동산돈놀이를 벌이고 제주영주권을 받아가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말 많고 탈 많은 헬스케어타운이다. 헬스케어타운에 땅을 내준 주민들의 울분과 울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에 돈을 대고 특혜를 본 곳이 바로 녹지그룹이다. 지금도 중국자본의 제주잡식에 대한 도민의 근심이 많은데, 부동산재벌 녹지그룹이 영리병원까지 짓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비영리병원,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중국녹지그룹 영리병원이 현실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통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료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노골적인 돈벌이 의료를 할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법과 제도 또한 영리병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등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보장성 강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입원 의료비 인상 등 오히려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싼얼병원은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생생히 보여주었다.

2008년 영리병원 도입논쟁 및 작년 싼얼병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민의 뜻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의료민영화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원희룡도정이 섬겨야 할 대상은 도민이지, 녹지그룹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은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원희룡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라!!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의 설립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될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원희룡도정에게 도민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2015. 4. 3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문의 : 양지호(공동대표) 010-3694-4106  
양연준 010-2494-9799  
오상원 010-4208-3608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기자회견문

###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의료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는 ‘비영리병원’, ‘전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전병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현실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 통제 아래 운영되는 의료공공성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며 노골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의료를 할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법과 제도 또한 영리병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영리병원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기관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신평병원 논란때도 확인되었던 사항이다. 불법시술과 과잉진료가 이루어져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리·감독 개입할 수 없는 곳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다.

셋째, 외국영리병원 도입은 국내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지고,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자유구역등의 외국영리병원 허용논리는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진료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이런 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고, 국내자본

**부동산투기꾼이 영리병원 웬말이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및 기존병원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켜 결국 국내영리병원 허용으로 귀결될 것이다. 국제녹지병원 설립은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첨병이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넷째, 녹지국제병원은 자체로 문제가 많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는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와 9명의 의사등 140여명의 직원수로 병원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인력구조가 매우 기형적이다.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제주대병원이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업무협약은 맺은 것 역시 문제투성이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마취부작용등 촌각을 다투는 심각한 부작용이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제주대병원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면 성판악을 넘어 약 40분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응급상황을 포기한 것이다. 국공립병원인 제주대병원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도입에 견인차역할을 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녹지국제병원은 피부, 성형으로 돈을 벌겠다는 기형적인 영리병원이며, 응급상황 시 대처가 불가능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하의 병원이다.

### **보건복지부와 원희룡도정은 녹지국제병원을 설립을 불허하라!!**

녹지국제병원 설립의 타당성은 없고 문제점만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승인요청을 불허해야 한다.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의 외국영리병원이 국내에 존재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원희룡도지사는 국민과 도민의 뜻에 반하여 영리병원을 설립을 허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08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작년 썬얼병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민의 뜻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의료민영화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부동산투기꾼이 영리병원 웬말이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도민의 반대로 무산되었  
다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의 설립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 될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천명하는 바이다.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정은 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영리병원 저지하고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부동산투기꾼이 병원은 웬말이냐!! 녹지국제병원 결사반대한다!!**

2015. 4. 14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꽃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이상 30개 단체 • 정당)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 **공공의료 팽개치고, 녹지국제병원 우선하는 제주대학교병원 규탄한다.**

-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 응급의료 MOU체결한 것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
- MOU 체결로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는 제주대학교병원 규탄한다
- 공공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綠地國際病院) 응급의료 MOU를 파기하라

1월 30일 제주대학교병원,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 JDC 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 서비스 수준향상 및 도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의료관광활성화등을 위한 협약으로 보도된 이 3자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이 그린랜드헬스가 만드는 영리병원(국제녹지병원)과의 응급의료 업무협약이었다.

###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선 제주대학교병원을 강력 규탄한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뜻은 2008년 첫 공식조사 이래 계속 반대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런 도민의 뜻조차 무시한 채 영리병원 응급의료MOU를 체결하여 영리병원 도

입에 앞장선 제주대학교병원을 강력 규탄한다.

작년 산악병원의 영리병원 설립이 불승인된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제주도내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 MOU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영리병원 MOU체결은 공공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 도입하는데 중요 요인을 충족시켜 준 것이다. 즉,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도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에 제주대학교병원이 나선 것 자체가 문제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운영목적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 장비 및 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필연적으로 공공의료를 후퇴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의 MOU체결은 제주대학교병원의 본연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제주대학교병원은 거짓해명을 중단하라!! 제주대학교병원은 MOU를 파기하라!!**

제주대학교병원은 응급환자 진료는 병원의 필수업무라고 변명하면서 MOU체결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MOU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제주대학교병원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MOU를 맺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응급환자 진료의무 운운하는 것은 제주대학교병원이 국민과 도민을 현혹시키는 거짓 해명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이 맺은 MOU의 본질은 영리병원은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거나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의 응급의료를 대신해주겠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이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MOU의 본질적 내용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영리병원을 위해 부역할 권리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가?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 도입에 총대매고 앞장선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응급환자 운운하며 도민을 호도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제주대학교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제주대학교병원은 국민과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영리병원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주대학교병원이 국민과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영리병원 MOU를 즉각 폐기하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응급의료MOU를 폐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우선시하여야 할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MOU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부동산투기꾼이 병원은 웬말이냐!! 녹지국제병원 결사반대한다!!*

*MOU체결로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는 제주대학교병원 규탄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영리병원 MOU를 즉각 파기하라!!*

*영리병원 저지하고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2015. 4. 28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꽃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이상 30개 단체 • 정당)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성명서

### 원희룡 도정은 영리병원 물타기 중단하라!

- 짜고치는 고스톱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MOU 체결 규탄한다.

메르스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불안과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잊고 메르스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기 급급해 하고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민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적극 막아나서며 오히려 메르스 공포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돈벌이와 맞바꾸려 하고 있다.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고, 투자활성화 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영리회사, 영리병원 도입을 할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보건의료체계는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그 결과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도 못하는 허술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메르스가 첫 발병하던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초동 대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영리병원 반대여론 진화를 위한 물타기만 진행하였다.

지난 5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고있는 녹지그룹이 사업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우리 운동본부가 확인한 결과, 녹지그룹은 이미 법인자격문제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 철회 발표 이틀전인 5월 18일, 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MOU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녹지그룹은 사업계획 철회 발표가 된 5월20일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영리병원 사업관련MOU협약서를 신속히 체결하였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짜고 치는’ 영리병원 사업추진인 것이다.

*부동산투기꾼이 영리병원 웬말이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5월20일은 우리 운동본부가 제주도청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전국 집중집회를 예정했던 날이다. 아울러 지난 4월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반대기자회견을 도청에서 예정할 당시도, 제주도는 그날 아침 급작스럽게 국제 녹지병원 사업계획 제출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에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리병원 사업주에게 서류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장해주며 사업 계획 철회 발표를 억지로 늦추며 시간벌이를 보장하고 국민의 눈과귀를 속이고 있는 것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의료시장 활성화, 영리병원 추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허점투성이가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오고 있다.

우리 운동본부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과 생명은 장사수단이 아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2015. 6. 3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꽃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이상 30개 단체 • 정당)

제주영리병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입장 발표

공/동/기/자/회/견

- 일 시: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별첨: 제주영리병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제주도민 74%가 영리병원 반대 의사” “압도적인 영리병원 반대! 이제는 멈추자”

-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전/문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26일부터 3일간 전문 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려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1000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 응답자 1000명 중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강행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4. 제주도민은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성형, 미용 중심의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불과한 반면, 45.4%는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견이었다. 41.2%는 '헬스케어 사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현재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86.6%에 달했다.

제주도는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은 사업주체만 바꾸어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굳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도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이다.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의료분야에 있어서까지 자본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중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녹지그룹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제주도민들과 상생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5.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자신이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마저 포기한 채 강행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이제라도 선언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다.

.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표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연대해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다시 밝힌다.

2015년 7월 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690-031)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399 4층/팩스 064-757-7211  
관련 문의/집행위원 오상원 010-4208-3608

“메르스 와중에 영리병원 재추진이라니...”  
‘정책 독재자’로 가는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 성/명/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영리병원을 재추진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공공의료분야 공약이 단 한 줄도 없는 원희룡 도정이, 출범 1년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허겁지겁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주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혁신하고 대안마련을 하겠다는 보도는 결코 아니었다.

어젯밤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정점에 있던 6월 중순, 원희룡 도정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을 때, 뭐가 그리 급했는지 충분한 공감대도 없고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드림타워, 영리병원 등 유독 ‘녹지그룹’ 앞에서는 작아져야 할 이유라도 원희룡 도지사에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밀실에서 비밀 작전하듯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도민들 모르게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정책에 있어서는 모두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협치 도지사’는 선언만 한 채 돌아 올 줄 모르고, 정작 그 자리에는 ‘정책 독재자’의 모습이 투

영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 공개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사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제라도 정책 독재의 모습이 아닌 도민을 위한 협치를 복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하고 제주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서 도민과 소통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끝내 영리하지 못한 정책에 불과한 영리병원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도민운동본부 역시 모든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밝혀두는 바이다.

2015년 7월 2일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앞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 [공동 기자회견문]

#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하는 박근혜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